

“광주 자동차 벨리 조성사업, 사회통합형 일자리 창출 새 모델”

새정치연합 '소득주도 성장론과 광주형 일자리' 토론회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 자동차산업 육성과 '광주형 일자리정책'을 최근 당이 주창하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본보기로 삼아 당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민주정책연구원은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득주도 성장론과 광주형 일자리 토론회'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소득주도 성장론을 펴온 문 대표는 이날 "광주시가 추진하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첨단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에서 특별한 것은 노동자와 기업, 민관이 대타협해 새로운 사회통합형 일자리 모델이 논의되는 점"이라며 "고용 친화적 산업정책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계 소득을 높이는 소득주도 성장의 구체적 실현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와 새정치연합은 이 사업이 광주를 넘어서 국가적 차원의 산업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창현 광주시장은 축사에서 "광주는 노사민정 사회대타협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해 주는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고자 한다"며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대돼 소득주도 성장론의 롤모델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정 정책위의장은 "광주의 미래를

일정수준 임금 보장하고

노사민관 대타협 추진

文대표 "국가적 차원 지원을"

책임질 자동차부품 클러스터와 광주형 일자리정책이 중앙 의제로 격상돼 반드시 현실화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동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장은 "광주는 자동차산업 부흥을 위한 선도시로 변화하고 있고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여건을 준비 중"이라며 "광주형 제조 혁신·상생 모델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소득주도 성장론의 타당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첨단산업(차세대친환경자동차)은 성숙산업의 취약지구가 아닌 성숙산업의 현대화 지역에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광주에서 생산적 노사관계는 중요하다"며 "그런데 국내 여타지역의 자동차산업 노사관계는 굴절·교착 국면으로 단기간 해결이 어렵지만 광주시는 지난 10여년간 국내 투자의 중심지였고 노사관계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어서 사회통합형 노사관계 구축으로 새로운 생산방식과 노사관계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장표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는 광주 자동차혁신클러스터 조성과 관련, "지역 노사민정 협약으로 생산성 연동 임금제, 법정근로시간 준수, 상생임금 교섭(임금 격차 해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합의 등 소득주도형 클러스터로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광주경제 성장의 지렛대 자동차산업"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클린디젤 기술 개발 ▲친환경차량 경량화 및 부품 생산기술 개발 ▲융복합 고부가가치 특수목적 자동차 기술 개발 등을 제시했다.

유영태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 기획사업추진단장은 "광주의 자동차산업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는데 국내 자동차업체는 현지화전략을 추구, 암울한 상황"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중소기업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위한 정책지원 ▲광주가 신노사문화 정착으로 우리나라 고성장성 제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 ▲동남아 등 제3세계에 자동차를 수출할 수 있는 특화된 수출시장 개척 ▲자동차 튜닝산업 집적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소득주도 성장론은 임금 분배율을 높여야 유효수요가 늘어나고 경제도 성장한다는 경제논리로 '임금주도 성장론'으로 불리기도 한다. 반면 '우선 파이를 키워야 나눠 먹을 게 생긴다'는 관점의 논리는 '이윤주도 성장론'으로 불린다.

한편 소득주도 성장론은 임금 분배율을 높여야 유효수요가 늘어나고 경제도 성장한다는 경제논리로 '임금주도 성장론'으로 불리기도 한다. 반면 '우선 파이를 키워야 나눠 먹을 게 생긴다'는 관점의 논리는 '이윤주도 성장론'으로 불린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론과 광주형 일자리 토론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자 신고의무, 불고지죄·연좌제와 무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인터뷰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공직자가 배우자의 수수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데 대해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임으로 양심의 자유,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배우자는 처음부터 처벌의 대상이 아닌 만큼 불고지죄와 무관하다. 배우자의 죄책으로 본인이 불이익을 입는 연좌제와도 무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론 자유 침해에 대해선 깊이 고려할 여지가 있다. 언론의 자유가 침해 안 되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언론의 자유는 특별히 보호돼야 하는 중요한 민주적 가치이자, 꼭 필수적인 자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배우자의 수수사실 신고의무 조항이 불고지죄나 연좌제금지에 어긋나는 것 아닌지.

▲이 법이 적용될 경우 배우자는 처음부터 처벌 대상 아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처벌을 전제로 하는 불고지죄와는 관련이 없고, 배우자의 죄책에 대해 본인이



언론자유 위한 특대책 필요

규정 합리적... 위헌요소 없어

불이익을 입는 연좌제와도 아무 관련이 없다. 오히려 공무원 등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임으로 양심의 자유,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직무관련성 없어도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시 처벌하는 조항이 위헌성 있는 것 아닌지.

▲이 조항은 단순히 직무관련성 여부 뿐만 아니라 사회상규상 허용 여부 등에

외조항과 연계해 해석해야 한다. 사회상규상 공직자가 공짜 돈봉투를 받아야 할 합당한 이유가 없느냐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는 뜻이다. 이처럼 허용규정이 합리적으로 규정돼 있어 위헌요소는 없다고 본다.

-시민단체·의사·변호사·노동단체 등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향후 민간분야로의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민간분야로 확대에 있어 범위와 속도, 방법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의 형성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00만원 이하 직무관련성 있는 수수시 뇌물죄로 처벌하나 김영란법으로 처벌한다.

▲중복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검사가 기소할 때 뇌물죄가 명백하면 뇌물죄로 기소할 것이다. 그런데 뇌물죄 입증에 있어 대가성 입증에 조금 부족한 경우에는 이 법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상규 부분은 여전히 모호하고, 입증을 위해 기회비용이 지나치게 클 수 있는데.

▲공급적으로 수수와 직무관련성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지만,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입증필요는 있을 수도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 누리과정 예비비 늦어도 25일까지 배분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3~5% 올려야"

정부가 목적예비비로 확보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국고 지원 예산을 조만간 시·도 교육청에 배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10일 "여야가 다음 달 지방재정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누리과정의 목적예비비 5064억을 푸는데 장애요인이 사라졌다"며 "어떤 방식으로 예비비를 배분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르면 내일 예비비 배분 계획을 담은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발송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이 보육교사 급여 등을 지급하는 오는 25일까지 예비비를 배분하면 된다"며 "그때까지 의사결정을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은 누리과정 국고 지원은 물론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법정교부율을 3~5%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놔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광주 등)이 10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지방교육재정의 실태 및 수요증대 요인과 대책'이라는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는 "지방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부예산 중 교육예산비율은 갈수록 떨어져 1990년 22.3%에서 2014년 15.2%로 낮아졌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법정교부율을 최소 23.2%에서 최대 25.3%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내국세의 20.27%로 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3~5% 정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지방교육재정 확보 방안으로 시·도세 전입금 비율 인상과 내국세 교부

율 인상을 들면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측면에서 보면 내국세 교부율 조정이 시·도세 전입금 조정에 비해 우월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누리과정은 국가의 정책적 추진사업이므로 당연히 국고보조로 지원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추가재원 확보 없이 추진해온 누리과정으로 시·도교육청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상에 유아교육이 포함되고 사립유치원 재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지방교육재정의 경직성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장외국 광주시교육감 등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요구하는 내용과 같이 향후 교육감들의 행보에 힘이 실리게 됐다.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을 시사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곤혹스럽게 됐다.

/박정기자 jwpark@kwangju.co.kr

2015 영암왕인문화축제

Yeongam Wangin Culture Festival 2015

4.9(목) ~ 4.12(일) / 전라남도 영암군 왕인박사유적지

개막행사 '왕인! 소통의 길을 열다' : 4.9(목) 18:30 / 왕인박사유적지 주무대

공연·문화행사

- ▶ KBS국악관현악단 특별공연
- ▶ 영암인쇄놀이 다섯마당
- ▶ 제1회 천자문 성독대회
- ▶ 왕인어린이 재롱잔치

체험·놀이행사

- ▶ 왕인전통 놀이마당 (두드림 난장, 제기차기 등)
- ▶ 천자문 놀이마당
- ▶ 아시아 전통문화체험
- ▶ 일출신 꽃제형

부대행사

- ▶ 왕인 김성령명품
- ▶ 구림마을 자연거림방
- ▶ 구림마을 왕인열차투어
- ▶ 구림 한옥마을 스테이

판매행사

- ▶ 왕인 먹거리장터
- ▶ 다문화 음식관
- ▶ 친환경 로컬푸드 판매관
- ▶ 왕인 농·특산물 판매관

<대표 프로그램>

왕인박사 일본가요

4.11(토)~4.12(일) 14:00~15:30

행렬코스 : 왕인박사 탄생지-홍실문-봉선대-성대묘 역사공원

빛의 향연 '왕인미디어 파사드쇼'

4.9(목)~4.11(토) 야간행사

'왕인'을 테마로 영암관 전면을 수놓을 화려한 미디어 파사드쇼

영암군향토축제추진위원회 061) 470-2346~50 영암군청 문화관광체육과 061) 470-2259

영암군 홈페이지 www.yeongam.go.kr

네비게이션 길 안내 : '왕인박사유적지' 또는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왕인로 440번지'

▶ 주최 : 영암군

▶ 주관 : 영암군향토축제추진위원회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 KATA 한국여행협회, 한국지역진흥재단